



## ▶▶▶ 산업동향



- 기업 52.9% “내년 확대경영 할 것”
- 정부, 2012년 中企제품 구매 100조로 확대
- 中企 32% “내년 경기 좋아질 것”
- 원재료값 계약금액 오를때 단가인상해야
- 내년 경제 5% 내외 성장 유지
- 중소기업 경기 석달째 하락세
- 中企 생산직 평균 일급 5만7884원
- 2010년 우리 수출 세계 7위
- 신설법인 4.4%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세

## 기업 52.9% “내년 확대경영 할 것”

기업 절반이상이 내년에도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확대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주요기업 272곳(대기업 120곳, 중소기업 152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11년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52.9%가 내년에 확대경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는 곳은 29.8%,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17.4%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해 확대경영하겠다는 응답률은 9.3% 포인트 높아졌고 긴축경영을 선택한 답변 비율은 9.4% 포인트 줄었다.

확대 경영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신사업 진출(30.4%), 해외시장 개척(22.8%), 설비투자 확대(21.7%), 핵심인재 확보(13.0%), 기업 인수합병(8.7%) 등을 들었다.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곳은 대기업이 58.4%, 중소기업이 34.7%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8.4%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25.0%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최고경영자의 73.6%가 현 경기가 상승국면이라고 답했지만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50.4%로 낮아졌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평균적으로 1천62원, 중소기업은 1천150원이라고 답해 양측 간에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27%로 집계됐다. 또 절반이 넘는 53.3%가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하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 정부, 2012년 中企제품 구매 100조로 확대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동반성장을 앞장서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금 직불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를 올해 77조2천억원 규모에서 내년 85조원, 2012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 실적 점검 대상 기관도 현재 205개 기관에서 2012년까지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6월에 공공구매론에 대한 신·기보 보증이 도입되며 소프트웨어 용역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별 분리발주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 시행기관을 기존 1곳(LH공사)에서 철도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곳을 추가해 확대한다. 7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액 제한 없이 내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 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용역 서비스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 적용한다.

소규모 공사의 표준품셈 할증제 활용이 촉진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단가 조정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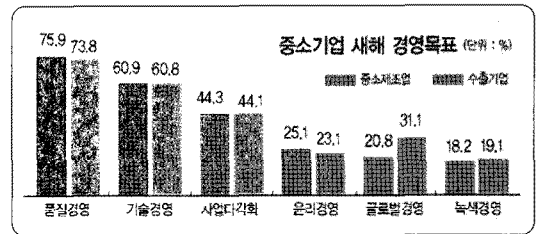
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보유 특허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2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2.8%가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답했다.

특히 서면계약비율은 9월달 53.2%에서 지난달 말 6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 32% “내년 경기 좋아질 것”



새해 중소기업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물론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1천4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중소제조업 경기 및 경영환경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31.6%에 달해 올해보다 악화된다고 전망한 업체(22.4%)보다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는 응답 비율

은 수출 중소기업(36.8%)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중소기업들의 내년 경기전망 체감도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업황전망지수(SBHI)는 105.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호전된다고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전망한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경기 호전 전망에 따라 내년 중소기업의 신규채용과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응답 기업 중에는 내년 신규 채용을 확대(32.6%)하겠다는 업체가 축소(3.2%)하겠다는 업체보다 월등히 많았다.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30.2%와 33.1%를 차지해 축소(각각 3.1%, 2.8%)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내년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75.7%)과 물가 상승(60.7%), 금리 인상(44.8%), 환율 불안(39.0%) 등을 꼽았다. 새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61.1%)와 인건비 상승(44.5%), 업체간 과당경쟁(44.2%)을 주로 지목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둔화(35.2%)와 환경·무역 등 기업 규제(12.5%)를 우려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새해 경영 목표로 품질경영(7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술경영(60.9%), 사업다각화(44.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점 경영부문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확대(70.3%)와 생산성 확대(63.7%)등을 들었다.

## 원재료값 계약금액 오를때 단가인상해야

내년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3% 이상 올랐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납품업체)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이 당초 맺은 계약과 달리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중기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을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대기업을 반드시 10일내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심층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되 우선 내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화점, 대형 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종별로 매년 상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부당반품, 관촉비용 부담전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판매 가격과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간 인수·합병(M&A) 심사 때 관련시장 범위를 제한된 범위의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 내년 경제 5% 내외 성장 유지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유지하고 내년에도 재정을 통해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위협요인으로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는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1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수출은 10%, 수입은 15%가량 늘면서 교역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되도록 해 나가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2조5천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시장과 관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화도급 계약서 사용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경기 석달째 하락세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새해 중소기업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1천4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결과 2011년 1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3.4로 전월 94.8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1월 95.3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셈이다.

이는 토목, 건설 등 일부업종의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가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90.4)은 전월대비 0.9포인트, 중기업(99.7)은 전월대비 2.4포인트 하락해 기준치를 밑돌았다. 공업구조별로도 경공업(91.9)과 중화학공업(98.8)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다.

기업 유형별로도 일반 제조업(91.9)은 1.3포인트, 혁신형 제조업(98.8)은 2.4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13개 업종에서 지수 하락 현상이 나타났고, 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 8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생산, 내수판매,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사정은 소폭 하락했으나 수출 전망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12월 중소제조업 업황실적은 전월 89.0 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0.1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 중기업 모두 소폭 상승했으며 기업유형별로도 일반제조업, 혁신형제조업 모두 상승했다.

## 중소 생산직 평균 임금 5만7884원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중소 제조업체 1200곳(177개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5만7884원으로, 전년(5만4638원)보다 5.9% 상승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0년(2만7238원)에 비하면 2.1배 많아진 금액이다.

이 임금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국가와 계약을 할 때 제조원가에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조사 대상 업체는 근로자가 20~299명인 중소기업이다.

하루 8시간 근무가 기준이 되며 위험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하되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주요 직종의 생산직 평균 일급은 보통 인부 5만 3160원, 작업반장 7만4290원, 품질관리공 6만6813원, 부품조립공 5만3926원, 제품출하공 5만940원 등이다.

또한 제품검사공 4만7972원, 기계정비공 7만1266원, 용접공 7만90원, 물품포장공 4만9081원, 프레스공 5만3천8원 등으로 집계됐다.

일급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기사(12만4092원), 컴퓨터운용사(10만7246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사(10만204원), 품질관리사(9만729원), 안전관리사(9만616원)였다.

하위 5개 직종은 인타로그공(3만9626원), 스넵공(4만3136원), 하침공(4만3376원), 뼈데도포공(4만3천613원), 회전쇠톱공(4만5613원) 등이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수출이 2009년 대비 28.6% 증가한 4674억 달러를 기록해 종전 기록인 2008년의 4220억 달러를 가볍히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수출 순위도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제치고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총 4257억 달러.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확대됐다. 특히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됐다.

LCD패널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은 44.1%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반도체는 13.3%로 3위를 차지했다. 31.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무선통신기와 조선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무선통신기는 2009년 19.3%에서 꺾총 뛰어올랐다.

수입도 유가상승과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며 2009년 대비 31.8% 증가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5000억 달러를 초과하며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1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한 5130억 달러, 수입은 14.6% 증가한 4880억 달러로 2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우리 수출 세계 7위

“이탈리아·벨기에 제치고 2계단 상승…올해 무역 1조弗 달성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출순위도 2009년 9위에서 2계단 올라선 7위를 기록했다.

**신설법인 4.4%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세**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1월 신설법인은 4,895개로 전월비로는 1.5%(73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4.4%(205개)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1월 누계 신설법인은 54,853개로 2003년 이후 1~11월 누계 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11월 신설법인 4,895개 역시 11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0. 11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 전월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개월 연속 증가세이나 건설업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지역별 전월비로는 서울과 부산 등을 포함한 7개 시도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증가했다.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8.6%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0.7%p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중은 63.1%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했다.

연령대별 전월비로는 30세미만(△3.0%)과 50대(△1.7%)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했다. 성별 전월비로 남성은 1.4%, 여성은 2.0%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남성은 2.4%, 여성은 11.7% 증가했다.

자본금규모별로는 전월비로 1억초과~5억이하(△8.4%)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1억초과~5억이하(△13.2%), 5억초과~10억이하(△8.8%), 10억초과~50억이하(△20.8%)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난 달에 이어 1억초과 창업은 감소하였으나, 1억이하 소규모 창업은 증가했다.

문의 : 규제영향평가과 박정민(042-481-4556)